

## 찬란한 백제불교문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미륵사지 등 백제유적 8곳, 4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등재지역은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총 8곳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등재지역에서는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등 불교유적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7월 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정림사지 5층석탑.

**韓 총 12곳 유산 등재 ‘해기’**  
동아시아 문명의 절정 평가  
백제 문화 재조명 기회될 것

관과 조경기술 속에 불교사상이 녹아있는 정원과 중국식과 일본식 양식이 혼성돼 있다.

등재지인 부여 정림사지도 사비도성 내 유일하게 석탑이 남아있는 사찰터라는 점과 당시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정림사는 1탑 1금당식 양식을 띄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의 고대 사찰인 사천노지(四天王寺)와 같은 양식으로 백제의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웅진시기 백제 왕릉군인 공주 송산리고분군도 불교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송산리고분군 중에는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과 달리 지붕을 구워 만든 벽돌무덤으로 연꽃 문양을 쓴 벽돌이 사용됐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선정결과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해당지자체가 보존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신심과 원력이 만들어낸 절경... 동티베트 ‘야칭스’

야칭스는 중국 쓰촨성 고산 지대인 바이위현에 있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공동체이다. 이 같은 야칭스의 전경 사진이 불교 언론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칭스는 1985년 라마야추 립포체가 이곳에 사원을 세우자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마을이라고는 해도 한국의 6.25 동란 당시 피난촌을 연상시키는 판자집들이 이어져 있으며, 비구·비구니 1만여 명이 수행과 교학 공부를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손에 염주를 놓지 않고 수행을 하는 이들의 신심과 원력이 티베트 불교의 힘을 보여준다.

중국 쓰촨=신성민 기자 (관련 연재 12면)

## “이웃종교 타산지석 삼아 불교 발전 도모”

조계종 불교사회연구, 〈타종교 현황 기초 조사 보고서〉 발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7월 7일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을 정리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조사보고서는 먼저 출간된 340쪽 분량의 〈상세종합자료집〉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슈를 선정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본법제 △운영구조 △일반조사통계 △종교별 공식통계 △재정 및 자원관리 △사목·선교·교화 △가톨릭의 성직자 양성 및 인사 제도 △개신교의 교제 제도 및 교직 구조 △원불교의 교직 및 교제제도 △성직자의 기본생활과 노후보장 제도 △신도·교도·사회교리와 대사회활동 구조 및 주요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종단 간간 중헌, 교리 반영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이웃종교의 경우 각 종교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법〉〈교회법전〉, 개신교 〈교회헌법〉, 원불교 〈교헌〉의 경우에는 교단의 구성원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가톨릭 교회법의 경우 성서에 입각해 20년간의 공의수렴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함 과정을 거쳤다.

윤남진 NGO리서치 연구소장은 “조계종의 중헌은 대부분이 사회법에 따라 종단 기구와 운영체계 구성에 따라 종단 기구와 운영체계 구성

**가톨릭·원불교 교단 재정  
철저한 심의기구 거쳐 사용  
신부들 월급여 책정하는 등  
복지 지원... 사명 시 환입**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헌에 대한 개정도 이웃종교에 비해 잦다. 불교교리에 기반해 불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법으로 중헌이 자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웃종교 재정 투명화 어떻게

이와 함께 불교계가 이웃종교가 재정관리에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

해 노력하는 부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가톨릭의 경우 재정관리 규정이 교구별 본당에 갖춰져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교구별 교육비, 자선복지비, 사제공제회비, 각종 기금 등을 적시해 지킴으로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예산 편성과정도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본당 재정관리위, 사목평의회 상임위, 본당 주임신부 재가, 교구 재무평의회 검토, 교구장 심의 등을 거쳐져 되어 있다.

가톨릭의 경우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을 두고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장기적인 보존, 관리 등의 전략을 수립한 것도 특징이다.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교도들의 헌공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가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자체적으로 산업·농업·의원을 설립해 그 소득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그 예산은 교정원장 편성과 중앙평의회 결의, 수위단회 승인 등을 얻도록 되어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개별 운영체계인 개신교의 경우 각 교회 재정과 회계 규정을 담자 정관에 명기해야 함에도 실태를 보면 상당수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여 투명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웃종교 성직자 노후 보장 ‘눈길’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각 종교의 성직자 노후보장 제도에 대해 다뤘다. 가톨릭 사제는 본당별 월급여가 책정되고 노후는 〈사제평의회공제회〉에서 관리된다. 특히 30명 이하의 아파트와 2억 원 이하의 지원이 되고, 모든 지원이 사망시 교구재산에 환입되도록 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월급여에서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고 교회가 일정비율을 부담해 노후를 보장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교구공동체 자치를 목표로 하는 불교의 경우 개신교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펴낸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20여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종단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현황을 조사해 종단의 장기적 데이터로 축적하고 향후 정책사업에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서를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보고서의 주제별 조사파일은 논문, 문서자료, 웹자료 등으로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원로회의서 ‘중헌’ 개정안 인준

7월 8일 만장일치 통과...원로회의 인준권 강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가 ‘중헌’ 개정안을 7월 8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그동안 세차례나 부결된 끝에 통과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중헌 제9조 3항인 종단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의 강제성이 강화됐으며 총림 방장 연임 금지 및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원로회의 인준 등이 포함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7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49차 원로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로의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총무보고에 이어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원로회의의 권한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로 스님은 “방장 추대에 대해 원로회의는 발언권이 없다”며 “방장 문제는 중회를 거쳐 결정은 원로회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로회의는 중앙총회에 “중헌”에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로회의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원로회의에서는 총림 방장 자격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또 중앙총회가 가진 방장 추대권도 원로회의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원로회의는 말년 징계를 받은 의현 스님이 ‘공권징정 3년’ 감형 판결을 받은 것과 선학원과의 법인법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 허위 유인물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2013년 12월 23일 약 100여 통의 허위 유인물(동화사 주지 선출에 S스님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 동화사 주지 S스님과 M스님의 허위 성스캔들 내용)을 만들어서 1차(2013. 12.23.), 2차(2013. 12. 25.), 3차(2014.1.2.경)에 걸쳐서 조계종 총무원, 각 본사, 선원, 교계신문, 한국일보 방송국에 허위사실을 배포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유인물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유인물 유포자 이윤O은 불순한 배후 세력의 꼬임에 빠져서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동화사 교구에 큰 분란을 일으킨 죄로 2014년 10월 2일 대구 지방법

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대구 봉덕동 효성타운에 살고 있는 나이 48세 이윤O으로 밝혀졌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우체국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익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인물 봉투에 묻은 지문하나로 범죄자를 밝히고 구속영장청구까지 하면서 배후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단과 검사 분들의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일을 계기로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유인물 피해자 명인 배상